

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결의문채택의건

의안 번호	1235
----------	------

발의년월일 : 2004. 5. 25.

발 의 자 : 임 종 응 의 원
외 13 인

1.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의 촉진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2004. 4. 1 시행)하여 기업이전 대상 지역 고시를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와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임을 감안 기업이전 대상 지역을 국가산업공단이 입지한 우리시를 포함한 성장관리 권역(경기도5개시)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수원 등 14개시)만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의 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 건의 하였음에도,
- 최근 정부의 시행 방안은 기업의 이전 대상 지역을 오히려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은 물론 자연보전 권역까지 확대하고 이전 기업에 대하여는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반월·시화 국가산업공단을 비롯한 수도권 산업의 공동화와 대량 실업에 의한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 우리시의 반월·시화 국가공단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업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현재 반월·시화 공단은 기술정체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기업의 부도 및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지방이전 대상 지역으로 지정 될 시 산업단지 공동화의 가속화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 붕괴등의 부작용 초래가 예상되며,
- 반월·시화공단내 중견 기업의 지방 이전시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 및 도산으로 인하여 대량 실업에 의한 고용 불안정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또한 경기 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 고도화 지원과 첨단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시의 첨단 산업 육성에도 큰 차질 예상됨.
-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정부의 기업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안산시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100인 이상 기업 지방이전 정책 반대 결의문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대량 실업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부의 획일적인 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기업 지방이전 대상 지역에서 즉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 산업단지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의 악취 및 대기 환경 개선에 특단의 종합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반월·시화국가공단의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 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4. 5. 25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